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달린다

새만금 주행시험장 본격 시험 가동 개시

상용차부품에서 차량까지 주행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시설인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전북 군산에 터를 잡고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군산시로부터 총 530억원을 지원받아 3년1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지난 2018년 12월 완공하고, 사용허가 완료 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가동을 개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총 면적 43만5,017㎡(약 13.2만 평)에 상용차의 주행안전 및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빗길 및 눈길을 모사한 저마찰시험로, 동력계통 및 연비를 평가하는 고속주회로, 주행수명을 예측하는 내구시험로 등 총 8개의 시험로와 관제와 기업유치를 위한 엔지니어링센터, 차량시험정비를 위한 정비동 등의 지원 공간을 구축했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공공목적으로 구성된 국내 자동차 주행시험장 중

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크며, 모든 시험로면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상용차 및 특장차의 최대적재 상태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주행성능 인증시험 및 평가장비를 14종 86억원 규모로 구축하여 완성차, 특장차,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차량실증 주행, 인증, 부품개발 지원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으로 전라북도가 전기, 수소상용차 및 군집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충전설비의 확충과 더불어 차량 및 인프라간 Wave 통신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

또 상용차산업의 성장을 위해 시설 공동활용과 기술개발 협력이 가능한 도내외 자동차 관련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국내 완성차, 시험 및 부품업체 등 8개사로부터 입주 신청을 접수받았다.

3월 말까지 입주기업 선정을 마무리한 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입주 후 시설공동활용, 차량 및 부품인증, 공동연구개발 추진 등을 계획하

고 있다. 신기업 중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인 차량통신, 레이더, 라이다 센서 등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도 있어 상용차자율주행준비를 준비 중인 전북도의 성장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전북 미래 상용차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품질 검증, 제품인증, 성능평가 이외에도 첨단전자지원시스템(ADAS), 자율주행차 개발초기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상용차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수소기반의 자율주행상용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전북도 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의 공식적인 가동을 일컫는 준공식은 대내외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말에 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가 지난 22일 '소셜캠퍼스는 전북'에서 관련 사회적경제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범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기관·단체 머리 맞대

전북도, 관련 조직 합동 워크숍 상호 의견 교환하는 시간 가져

전북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는 '소셜캠퍼스는 전북'에서 도·시·군·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등 관련 사회적경제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류는 협회·단체 중심 기능별로 개별적으로 현장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타기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어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였

으며, 지난 1월 20일 사회적경제과 신설이후 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분야가 한자리에 모여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과 과제에 대한 강연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정책방향, 분과별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전북연구원 황영모 산업경제연구부장)초청 강연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방향과 과제에 공유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회적경제 개념과 형태, 활성화 조건 및 전략에 대해 뜻깊은 강연을 펼쳤다. 전북도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시책,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성장단계별 공동체 육성에 대한 성과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공공구매 및 민간 판로지원 등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5개 분과별 토론회에서는 공공구매 및 민간판매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방안, 강한 마을 기업 육성 방안, 건설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방안, 자활기업 제품판로 확대 등 분야별 열린 토론회로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공고 제2019-526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명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소경정량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1	노후공원	어린이공원	중노후면적 253-75	1,759	1,759	-	면적 40호	87.4.30

2. 변경(폐지)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노후공원	공원폐지	한 공원 이용객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다목적소호센터 건립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공원의 경우 시설설치 기준이 제한됨에 따라 어린이 공원을 폐지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19. 03. 25. ~ 04. 11.(공휴일 제외)

4.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18), 체육산업과(063-281-2923)
 - 의견제출방법: 공람기간내 우편, 팩스(063-281-2615), 이메일(sjba1@korea.kr) 등 서면작성 제출(양식은 공람장소 및 전주시 홈페이지 참조)

5. 열람내용: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

6. 관련도시: 살림생태(열람장소 비치)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18) 및 체육산업과(063-281-2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전주 시장

미륵사지 석탑 부실복원 논란 “문화재청 책임져라”

익산 좋은정치시민넷,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의 정신적 충격 보상 권고

정부가 약 20여년간 225억원을 투입한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실복원한 문화재청은 책임을 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은 22일 성명을 통해 미륵사지 석탑 부실복원에 대한 책임과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권고했다. 또한, 발주처인 전북도는 책임 있는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시민넷은 “미륵사지 석탑이 원형대로 복원되지 않았고, 구조계산 등을 거친 실측설계도서 없이 축조되었다는 감사원 감사 발표는 매우 충격적 사건”이라며 “이에 도민과 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은 국내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오래 되고 규모가 가장 큰 익산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이다”며 “이런 국가문화재를 복원하는데 내부가 사 전감로 절차 없이 원형과 달리 복원됐고, 내부 적심을 축조하는데 안전성 검토와 실측설계도서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 실태” 결과에 대해 미륵사지 석탑의 원형이 훼손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석탑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 2층은 당초 설계대로 새 석재로 채웠으나 3층부터는 옛 석재를 써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어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재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넷은 “문화재청의 해명은 변명일 뿐 국내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오래 되고 규모가 가장 큰 익산을

치고 오는 4월 준공식을 앞둔 시점에서 부실 복원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복원된 미륵사지석탑 중서탑은 일제에 의해 시멘트로 덮여 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140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에도 버텼었다”며 그 가치를 설명했다.

또 “지난 1993년 복원된 동탑이 화강암을 기제로 깎아 줄속 복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서탑마저 부실 복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넷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석탑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전북도민·익산시민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기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산환경 조성

전북도, 낙농산업 5개 분야 9개 사업에 735억원 지원해

전북도는 올해 낙농산업 5개 분야(시설, 운영, 소비기반확대, 조사료, 질병예방)에 735억원을 투입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낙농산업 발전을 꾀한다.

지난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산환경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늘리고 농장에서 발생하는 축유 세정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에 1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오일방식의 착유캡트를 진공(공기)펌프로 교체하여 젖소의 유방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9억원을 지원하여 더욱 안전한 우유를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켜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55억원)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644억원), 질병예방 및 농장운영(14억원) 등을 지원한다.

도는 5개 분야에 예산지원으로 위촉된 낙농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도내 젖소농가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국내 젖소농가 감소, 유제품 수입량 증가로 우유의 국내 총생산액 감소로 이어져 낙농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젖소사육농가는 2017년 기준 461농가로 3만3000두로 2014년 대비 약 10% 감소했고 원유 생산량 역시 15만8000톤으로 2014년 대비 약 3%

감소했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에서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연간 5만5000팩(4600만원 정도)을 지원하여 아동의 우유 나눔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동의 우유 나눔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FTA 발효로 낙농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국민들께서는 건강증진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우유를 많이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전북도의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가격균형 협의

전북도는 지난 22일 도청 공민장 2층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사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가격균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적정성 제고 유지를 위해 시·군·구 관계공무원간 해당지역의 지가 동향과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 하는 등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 대해 시·군·구의 지가 차이를 최소화하고 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

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매년 도에서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한자리에 모여 행정구역간 지가균형 연석회의를 함으로써 이의신청 건수가 2016년 198건, 2017년 220건, 2018년 217건으로 최근 3년간 시·군·구간 지가균형에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각종 부담금과 국·

공유지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적정가격의 지가산정 및 지역 간 필지 간 가격 균형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근 지역 내 유사가격, 인근지역간 지가의 균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 간 실질적인 가격 균형을 높이는 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금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3-9700

www.jmaeil.com